허경만 도지사의 시·도 통합 발언에 대한 결의문(안)

의안 번호	287

발의년월일 : 2001. 7. 23.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o 지난 7월 18일 광주방송(KBC) 녹화방송에서 고 재 유 광주시장과 허 경 만 도지사의 대담방송을 통하여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충격적인 토론내용은 시·도민 모두에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하였으며,

o 이런 결과를 부추기는 한나라당 광주지부와 가칭 통추위 관계자, 그리고 일부 언론사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본질을 외면한 지역민의 갈등과 반목을 통하여 개인의 사욕과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작태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함.

2. 제안이유

o 광주시민이 전남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광주공동화를 막기위해 도청이전을 반대하면서 광주시청을 상무지구로 옮기는 발상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남발전을 저해하려는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라 판단됨.

o 광주시가 보통시로 되면 구청장 임명제, 구 의회 폐지, 공무원들의 강등과 도서벽지 근무 등을 고려해야 할텐데도 현실을 무시한 처사는 안타까운 일이며, 통합보다는 광주·전남발전의 공동방안을 강구해야 함.

o 시·도통합의 중차대한 사업을 사전의회와 협의없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지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되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26만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의원일동은 시·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권고 하고자 결의함.

결 의 문

우리는 최근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고 재 유 광주시장과 허 경 만 도지사가

대담방송에서 광주·전남 통합을 재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실로 경탄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부추기고 유도한 한나라당 광주시지부와 가칭 통추위 관계자는 물론 일부 언론사에 대하여도 심히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본질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갈등과 반목을 통하여 개인의 사욕과 입지를 확보하려는 그들의 작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를 보낸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민이 스스로 자기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등의 하자없이 추진되고 있는 도청이전문제에 대하여 이제와서 다시 중단이니 통합이니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청이 도민의 의사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데 왜 광주시민이 발목을 잡는지, 광주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청은 계속 광주에 존속하여야 하고 광주발전을 위해서 시청은 상무지구로 이전하는 구태의연하고 아이러니한 발상은 전남도민에게 뭐라고 해명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3면이 바다인 전남도가 내륙도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계속 존속하는 것은 전남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한계점에 있음이 명약관화함에도 이를 도외시 한채 계속 도청이전 문제가 지역민의 쟁점사항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전남이 통합하려면 양 시·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광주시를 보통시로 만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절차와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시·도지사의 의지만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술책이라는데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광주시가 보통시로 되고, 구청장이 임명제가 되며, 구의회가 없어지는 등 지금까지 누렸던 광역시의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광주시내에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강등 또는 도서벽지까지도 전보되어야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대다수 광주시민은 통합보다는 광주·전남의 공동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도민은 더 이상 놀이의 대상이 아니다.

광주·전남 통합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도청이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허 경 만 도지사를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한 10월까지 어떻게든 통합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며 광주광역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하겠다는 고 재 유 시장의 행동이 불필요한 논쟁을 재연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전가식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제 더 이상 지역민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시·도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사전 의회와 협의없이 시·도지사가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지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하여 정중히 경고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26만 목포시민과 더불어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시·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정중히 권고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고 관철하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1년 7월 일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장 복 성 (인)